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 전 재 난 과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근한 의원 외 1인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근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근한·정지원 의원(2인)

찬 성 자: 김낙관·김민성·김원섭·김재우
소진혁·양진오·이상호·이정희
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11인)

1. 제안이유

사회재난 위로금의 지원 근거와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 및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로금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위로금 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66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 3) 「지방자치법」 제13조

나. 부서검토: 안전재난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치료비”를 “치료비, 위로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장례비 :”를 “장례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치료비 :”를 “치료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장례비·치료비”를 “장례비·치료비·위로금”으로 한다.

3. 위로금: 재난으로 피해입은 사람의 회복 지원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제8조제1항 중 “장례비·치료비”를 “장례비·치료비·위로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u>치료비</u> 지원	4. ----- <u>치료비, 위로금</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③ ----- ----- -----.
1. <u>장례비</u>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1. <u>장례비</u> : ----- ----- --
2. <u>치료비</u>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u>치료비</u> : ----- ----- -----
<u><신설></u>	3. <u>위로금</u> : 재난으로 피해입은 사람의 회복 지원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④ -----

<p>기준과 <u>장례비·치료비</u>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제8조(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u>장례비·치료비</u>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p> <p>② ~ ⑦ (생 략)</p>	<p>----- <u>장례비·치료비·위로금</u></p> <p>-----</p> <p>-----.</p> <p>제8조(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 ① ----- <u>장</u></p> <p><u>례비·치료비·위로금</u> -----</p> <p>-----</p> <p>-----</p> <p>-----.</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 13. (생략)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나. (생략)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 차. (생략)

3. ~ 7. (생략)

검 토 의 건 서

부서명: 안전재난과

조 례 명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 ▪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로금 지원 기준·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8조)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 재난위로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 위배 사항은 없으나, ○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난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직·간접 지원 제도(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장례비, 의료비 등)가 있어 추가로 재난위로금 조항 신설 및 지원 시, 재난의 규모와 피해 및 보상 정도, 중복 지원 여부,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함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 재난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생계 안정 및 생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음 ○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재정수반 요인이 있으므로 재난의 피해 범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에서 적절한 지급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구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위로금 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에 따라 재정 수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난피해자의 위로금 지급 범위와 대상이 특정되지 않음에 따라 소요 재정의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 이소정(☎054-480-6738)